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

헤드라인뉴스 모든 주민 대상 단계별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시작

사회·복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州 전역 봉쇄조치 시행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격려금 등 지급

사회·복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상을 마련한 의료기관 지원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 접종 장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공부문 재택근무
확대 시행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버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모든 주민 대상 단계별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시작

캐나다 온타리오주 / 사회·복지

현재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양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는 2020년 12월 9일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승인 후 12월 14일 첫 접종을 시작했고, 뒤이어 23일 모데나 백신을 승인. 또한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백신의 안전성과 백신 공급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접종 가이드를 발표. 이 지침에 따르면 무료접종 대상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로,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도 차별 없이 접종

캐나다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

- 캐나다는 2020년 12월 9일 화이자-바이오엔테크(Pfizer-BioNTech)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고, 12월 14일 백신을 온타리오 주정부에 6천 회분, 퀘벡 주정부에 4,875회분 전달
 - 퀘벡市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89세 주민과 토론토 장기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음(세계보건기구 공식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보고 후 349일 만임)
 - 연방정부는 총 2천만 회분을 구입했으며, 추가로 5천6백만 회분 구입 선택권이 있음
- 캐나다는 12월 23일 모데나(Moderna) 백신(mRNA-1273)을 두 번째로 승인
 - 12월 말까지 16만 8천 회분 백신 공급, 2021년 초까지 2천만 회분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
 - 온타리오 주정부는 9만 회분을 더 받아 접종 시작
- 캐나다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와 모데나를 포함해 총 7개 백신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12월 24일 기준 총 4억 1천4백만 회분 확보
 - 아스트라제네카(2천만 회분), 존슨앤존슨(3천8백만 회분), 메디카고(7천6백만 회분), 모데나(5천6백만 회분), 노바백스(7천6백만 회분), 화이자-바이오엔테크(7천6백만 회분), 사노피(Sanofi)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 Smith Kline)(7천2백만 회분)

캐나다 연방정부의 백신 접종 관련 정보 공개

-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연방정부와 주(準)주정부의 역할이 다름
 - 백신 규제와 승인, 백신 조달과 사용에 관한 과학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역할이고, 관할 구역 내에서 백신 할당, 배포, 모니터링을 위한 보건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인력을 준비하는 일은 각 주정부와 주(準)주정부의 책임
- 캐나다에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 리스트 공개
 - 백신 재료, 알레르기, 항체를 만드는 과정, 투여 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안전성과 개발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정보 제공
- 백신 확보 협정에 관한 정보 공개
 - 총 7개 기업과의 계약 체결 내용
 - 백신 유통과 관리에 필요한 물품 계약 내용
 - 캐나다 전역에 백신을 배포하기 위해 냉동고 422개 구입(섭씨 영하 80도의 냉동고 322개, 영하 20도의 냉동고 100개)
 - 드라이아이스 업체 6곳 선정
 - 전국의 백신 정보기술 플랫폼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지침 발표
 - 캐나다에 사는 모든 사람은 2021년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
 - 1순위 고위험군
 - 노인복지시설 거주 주민과 직원
 - 80세 이상 고령자를 시작으로 70세까지(백신 공급량이 많아지면 연령 제한을 70세에서 5년씩 낮춤)
 - 의료종사자
 - 원주민 거주지역의 성인
 - 2순위 고위험군
 - 노숙자 쉼터, 감옥과 같은 교정시설, 이주 노동자들의 공동생활공간 거주자 및 직원
 - 필수 사업체 종사자
 - 나머지는 주정부 백신접종계획에 따름
- 백신의 안전성 및 효과에 관한 모니터링 계획 발표
 - 백신 개발 상황과 백신 확보를 위한 전 세계 국가와의 협력 내용 및 규정 공개

- 백신 부작용에 관한 평가 및 감시 시스템 활용 방안

온타리오 州정부의 단계별 백신 배포 지침

- 코로나19 백신 배포 3단계 실행계획 수립
 - 1단계(Phase 1): 가장 취약한 집단이나 시설의 의료종사자 중심으로 백신 접종
 - 1A 단계(2020년 12월 14일)
 - 토론토와 오타와 소재 장기 요양시설 및 의료종사자 일부(2,500명)에게 백신 접종
 - 백신 접종 계획을 알리고, 백신 유통 및 보관 등에 대한 테스트 시행
 - 1B 단계(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 온타리오 州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을 9만 회분 공급받아 최대 17개 병원에 전달
 - 의료종사자와 간병인에게 백신 접종(병원, 장기 요양시설, 은퇴자 주거지, 노인을 돌보는 단체 등의 의료인력과 간병인)
 - 1C 단계(2021년 1월부터)
 - 병원 의료종사자와 간병인, 장기 요양시설과 은퇴자 주거지 거주자, 원주민 거주 지역과 도시에 사는 원주민 공동체의 성인들에게 접종
 - 2단계(Phase 2): 온타리오 州에 백신이 더 많이 보급되면 바로 2단계로 전환
 - 1단계의 모든 구성원
 - 노숙자 쉼터, 감옥, 이주 노동자들의 거주지와 같은 공간의 구성원
 -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만성 질환자
 - 70세 이상 고령자
 - 3단계(Phase 3): 모든 사람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때

정책 평가

-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신뢰를 얻고 있음
 - 과학적인 전문지식과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 참고문헌 적극 활용
 -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례별로 설명(감염 합병증, 기저질환자의 증상 악화, 소아다기관염증증후군, 급성 호흡기 질환, 급성 심혈관 손상, 급성 신장 손상, 급성 간 손상 등)
 - 캐나다 연방정부 보건부, 州정부 공공보건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력
 - 백신 접종에 관한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 활용

- 코로나19 백신 배포 시 사회취약계층 배려
 -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도 해당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drugs-health-products/covid19-industry/drugs-vaccines-treatments/vaccines.html>(캐나다 연방정부 코로나19 백신 정보)

<https://covid-19.ontario.ca/covid-19-vaccines-ontario>(온타리오 주정부 코로나19 백신 정보)

<https://www.publichealthontario.ca/en/diseases-and-conditions/infectious-diseases/respiratory-diseases/novel-coronavirus/vaccines>

<https://www.ctvnews.ca/health/coronavirus/health-canada-approves-game-changer-moderna-covid-19-vaccine-1.5242821>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canada-administers-its-first-covid-19-vaccine-shots/>

고한나 통신원, hannahko0301@gmail.com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州 전역 봉쇄조치 시행

캐나다 온타리오州 /사회·복지

캐나다 온타리오 州정부는 2020년 11월 23일부터 토론토市를 비롯하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5개 지역을 단기 봉쇄하는 방역대책을 시행했으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자 12월 26일부터 州 전역을 봉쇄하는 조치를 단행. 비(非)필수 상점 등의 영업 중지, 공립 학교 겨울방학 연장 등의 대책과 함께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책도 시행

온타리오州의 코로나19 현황과 추이

-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 2020년 4월 일일 신규 확진자가 630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한 뒤 안정세를 보이다가 가을이 되면서 2차 유행이 시작
 - 11월 6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확산
 - 이에 州정부는 11월 23일부터 토론토市를 비롯해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5개 지역을 단기 봉쇄(lockdown)하는 강력조치를 취했으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음
 - 12월 5일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기며 계속 증가하자 州정부는 12월 26일부터 州 전역에 대한 봉쇄조치 시행을 발표
 - 참고로 온타리오州 인구는 약 1,474만 명
- 코로나19 중환자실 가용 병상 수가 한계에 도달
 - 12월 21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건수는 직전 4주 대비 74% 증가했으며, 이는 9월 초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
 - 코로나19 중환자실(ICU) 점유율은 9월 초에 비해 20배 증가
 - 중환자실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는 최악의 경우 2021년 1월 중순에 1,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감염 이외의 사유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례를 감안한다면,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중환자실 가용 병상 수는 한계치에 근접

州 방역대책 및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

- 12월 26일 州 전역의 봉쇄조치로 기존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인 5단계 색깔별 규제 시스템은 일시 중지

- 기존에 실행 중이었던 5단계 색깔별 규제 시스템은 그린을 시작으로 엘로우, 오렌지, 레드, 그레이 존(전면 봉쇄)으로 구분
- 주 전체 봉쇄조치는 북부 온타리오의 경우 14일 동안 시행하고, 남부 온타리오는 28일 동안 실행한 뒤 규제 지속 여부를 논의
- 이동 제한
 - 식료품 구입, 병원 진료, 취약한 지역사회 구성원 돋기 등 필수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집에 머물도록 출입을 제한
 - 모든 사업체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야간 통행금지나 여행 제한은 포함되지 않음
- 모임 제한
 - 같은 가구의 가구원만 모임 가능
 - 1인 가구의 경우 특정된 다른 한 가구와만 예외적으로 접촉 가능
 - 실내 공공행사나 사교 모임은 금지
 - 소매점 영업 제한 및 비(非)필수 상점 이용 제한
 - 소매 상업시설은 ‘커브사이드픽업’(특정 장소에서 제품을 차에 실어주는 서비스)과 배달만 허용
 - 식료품을 파는 대형할인점은 최대 수용인원의 25%로 이용인원 제한
 - 슈퍼마켓과 같은 식료품점과 약국은 최대 수용인원의 50%로 이용인원 제한
 - 쇼핑몰 실내공간 이용 제한. 실내 혹은 야외의 지정구역에서 픽업 가능
 - 식당 및 술집은 테이크아웃, 드라이브스루, 배달만 가능
 - 철물점과 애완동물 관련 매장은 비(非)필수 상점으로 전환
 - 카지노, 실내 스포츠시설 등은 운영 중단
- 공립학교 개학 연기
 - 온타리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학교 내에서의 감염 사례 보고는 150여 건
 - 4,828개의 공립학교 중 약 976개의 학교, 약 20%가 적어도 한 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
 - 학교에서의 감염 확산은 낮은 수준이지만, 1월 4일로 예정된 공립학교 개학을 늦추고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전환
 - 초등학교(유치원부터 8학년까지)는 1월 11일까지, 고등학교(9학년부터 12학년 까지)는 1월 25일까지 겨울방학 연장
 - 1월 4일 이후에는 보육센터 서비스와 의료종사자 등의 자녀 대상 긴급 보육은 실시

- 지역사회 단체 등에 자금 지원
 - 고위험 지역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1,250만 달러 지원
 - 15개 고위험 지역을 선별하여 지역사회 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
 - 격리센터 설립을 위해 4,200만 달러 추가 자금 지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지원책 시행
 - 소규모 사업체의 개인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1,000달러 지원
 - 州 봉쇄조치로 영업이 중지되거나 제한을 받은 중소기업 중에서 직원이 100명 미만이고, 2020년 4월 매출이 2019년 4월 대비 최소 20%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 직원 임금 혹은 임대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10,000~20,000달러의 보조금 지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을 환급해주고, 재산세 등 조세도 감면

<https://www.publichealthontario.ca/-/media/documents/ncov/epi/2020/covid-19-daily-epi-summary-report.pdf?la=en>

<https://news.ontario.ca/en/release/59790/ontario-announces-provincewide-shutdown-to-stop-spread-of-covid-19-and-save-lives>

<https://news.ontario.ca/en/backgrounder/59788/post-4>

<https://www.ontario.ca/page/businesses-get-help-covid-19-costs#section-0>

<https://www.cbc.ca/news/canada/toronto/covid-19-ontario-december-21-lockdown-orders-1.5849760>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격려금 등 지급

일본 오사카府 / 사회·복지

오사카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제적 측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위로금 및 격려금, 수당 지급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기관은 날이 갈수록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나 요양·장애인 시설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는 의료종사자들의 어려움도 날로 커지고 있음
 - 의료종사자 중에는 가족의 건강문제 등으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비로 호텔 등에서 숙박하는 사람도 적지 않음
- 오사카府는 의료종사자의 경제적 측면의 불안을 해소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의료체계의 안정화를 도모하려고 노력

주요 내용

- 의료종사자 등에게 위로금 지급
 -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나 직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고려해 위로금을 지급
 - 의료종사자는 ① 감염되면 증증화될 위험이 큰 환자를 돌봐야 하고, ② 개인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③ 의료기관의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는 등의 부담이 있음
 - 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
 - 다만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배려한다는 위로금의 목적을 생각해, 시설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10일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만 위로금을 지급

-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민간보험 가입 보조
 -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종사자가 감염에 대비해 산재보험과 별도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보조
 - 의료기관의 관련 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이나 보험계약 체결 등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
- 특수근무수당 지급 보조
 - 중증·중등증 확진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등에 직접 종사하는 의료종사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보조
 - 대상이 되는 의료종사자 1인당 1일 3,000엔(약 3만 원)을 보조
- 숙박시설 임차 보조
 - 코로나19 확진자 전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기 위해 야간근무를 하는 의료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한 숙박시설의 임차비용을 보조
 - 의료종사자가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 등과 동거하고 있어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임차하는 때에도 그 비용을 보조
 - 1실당 1일 4,000엔(약 4만 원)을 기준액으로 해서 숙박시설 임차비용을 보조하며, 운용 병상 수에 따라 상한액을 정하고 있음
- 기금을 활용해 의료종사자 지원
 - 오사카府는 의료종사자들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
 - 이러한 기금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요양시설 종사자에게 격려금을 지급
- 무상 또는 할인 요금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 소개
 -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는 의료기관 종사자만을 위해 무상 또는 할인 요금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소개

정책 평가

- 오사카府의 이러한 노력은 의료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제적 측면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이직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는 의료기관 등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음

<http://www.pref.osaka.lg.jp/iryo/2019ncov/iryoukikansien.html>
http://www.pref.osaka.lg.jp/jigyoshido/jiritu_top/irokin_sya.html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0681984.pdf>
<http://www.pref.osaka.lg.jp/iryo/2019ncov/tokushukinmuteate.html>
<http://www.pref.osaka.lg.jp/iryo/2019ncov/shukuhakukakuho.html>
<http://www.pref.osaka.lg.jp/iryo/2019ncov/iryoyujisyahotel.html>

권용수 통신원, dkrnnlwjstjf@naver.com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상을 마련한 의료기관 지원

일본 오사카市 / 사회·복지

오사카市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제공체계에 문제가 생겨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병상을 마련한 병원에 협력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배경

- 오사카府에서는 2020년 10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
 - 5명 이상, 2시간 이상의 모임 자체 등을 요청함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막고 있음
- 오사카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의료제공체계에 문제가 생겨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12월 3일 ‘의료비상사태’를 선포
 - 府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경제활동의 양립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의료비상사태 선포 이후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추진에 집중
 - 府는 7일간 연속해서 중증 병상 사용률이 60% 미만 수준을 유지하면 의료비상사태를 해제한다는 기준을 마련
 - 12월 18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중등증 병상 사용률은 68.8%, 중증 병상 사용률은 66.1%를 기록
- 의료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오사카府에 속한 오사카市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병상을 마련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오사카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병상 확충 협력금’(大阪市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患者受入病床拡充協力金) 제도를 도입
 - 오사카府에서는 1,319개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오사카市는 405개 병상을 운영
 - 오사카市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은 府 전체의 약 47%를 차지

주요 내용

- 市는 12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병상을 확보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지원

- 지원 대상은 기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의료기관 중에서 府에 제출한 '병상운용 계획'의 최대 병상 확보 수보다 더 많은 병상을 마련한 의료기관 또는 일반 의료기관 중에서 새로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의료기관이 된 곳
- 국공립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상관없이 지원
- 지원 대상 의료기관이 확보한 1개 병상당 1,000만 엔(약 1억 원)의 협력금을 지급
 - 경증·중등증 병상, 중증 병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1,000만 엔을 지급
 - 협력금은 2021년 1월 15일까지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급
- 협력금 지급 요건
 - 오사카府에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의료기관으로 등록할 것
 - 2021년 3월 31일까지 계속해서 병상을 운영하고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볼 것
 - 병상 배치 시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밖의 환자를 구분해 상호 독립된 동선을 확보할 것
 - 산소 투여와 호흡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것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동향

- 일본 중앙정부도 코로나19 확진자 병상·의료시설 확보를 위해 10월 이후 예산을 확보하고, 확진자 수용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에 힘쓰고 있음
 - 코로나19 중증 병상 운영 시 설비나 인력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수익성이 높은 의료행위 포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 또한, 지역의 의료제공체제를 유지·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자원이나 자위대를 활용해 병상이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

정책 평가

- 의료체계를 지키는 것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오사카市의 의료기관 지원책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https://www.city.osaka.lg.jp/kenko/page/0000521936.html>

<https://www.city.osaka.lg.jp/kenko/cmsfiles/contents/0000521/521936/kyouryokuonegai.pdf>

<https://www.city.osaka.lg.jp/kenko/cmsfiles/contents/0000521/521936/koronabyousyoukakujyuu.pdf>

http://www.pref.osaka.lg.jp/kikaku/message_governor/corona_message_2020.html

<http://www.pref.osaka.lg.jp/default.html>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 접종 장려

캐나다 앨버타주 / 사회·복지

앨버타주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계절 독감까지 겹치는 감염병 동시유행 현상인 ‘트윈데믹’(twindemic)을 우려해 독감 백신 공급량을 늘리고, 기존에 시행해 오던 전 국민 무상 접종과 약국 접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접종률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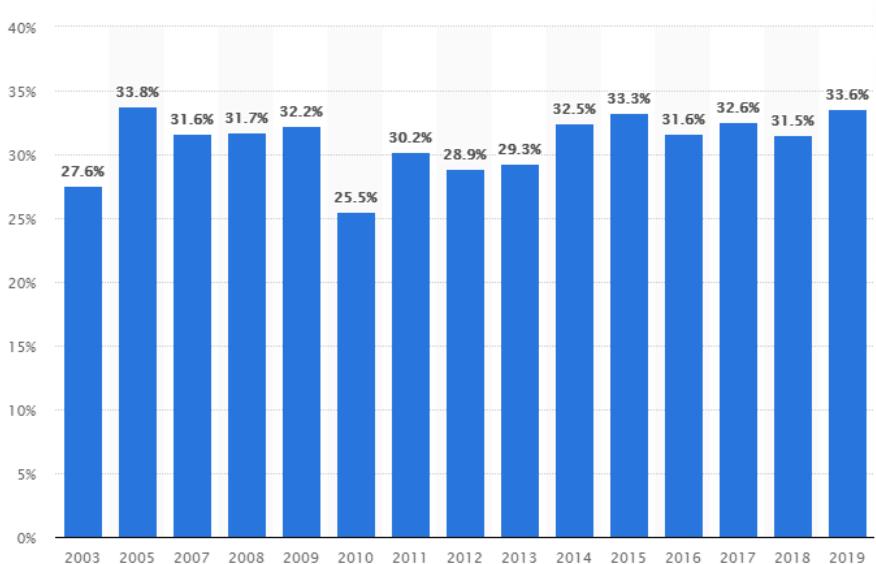
배경

- 겨울철 유행성 독감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동시유행 현상인 ‘트윈데믹’(twindemic) 우려
 - 앨버타주의 독감 예방 접종률은 2019년 33%로, 2018년의 30%에서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
 - 전 국민 무상접종에도 불구하고 성인 접종률이 30%를 기록해 근본적으로 백신에 대한 불안감 존재
 - 2019년 캐나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독감 예방 백신 미접종자 중 53.8%가 접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접종을 받지 않는다고 함
 - 캐나다 연방정부는 독감 백신 구매량을 2019년 1,120만 명분에서 2020년 1,300만 명분으로 약 16% 확대

주요 내용

- 코로나19 상황에서 독감까지 겹치는 트윈데믹을 우려한 앨버타 주정부가 독감 백신 공급을 확대
 - 2020년 독감 유행 시즌 동안 앨버타주는 주 인구의 45%에 접종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확보. 이는 2019년보다 23% 증가된 양임
 - 또한 예전보다 이른 시기인 2020년 10월 19일부터 예방 접종 개시
 - 독감 발병 건수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위험군에 속한 장기요양시설의 노년층과 의료 종사자들에게 고용량 백신을 제공
 - 2020년 앨버타주의 예방 접종률은 50%를 예상

- 무상 독감 백신 제공과 약국을 포함한 독감 백신 접종처 확대
 - 캐나다는 각 주정부 감독하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독감 백신 접종도 연령에 관계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무상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09년 신종플루 유행의 여파로 예방 접종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자 일부 주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약국 접종 제도를 실시
 - 캐나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접종자 중 가장 많은 35%가 인근 약국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 33%가 병원에서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캐나다에서는 백신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접종률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단, 5세 미만의 어린이는 앨버타주 보건부의 감독하에 운영되는 독감 예방 접종처에서 독감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함



[표 1] 독감 예방 접종률 추이(12세 이상)

출처: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434275/share-of-canadians-with-influenza-immunization-in-last-year/>

-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남
 - 캐나다의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향후 3개월 이내에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응답자의 47%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접종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음

<https://calgaryherald.com/news/alberta-orders-360000-extra-doses-of-flu-vaccine-for-2020>
<https://www.ctvnews.ca/health/flu-vaccine-orders-up-in-canada-as-simultaneous-covid-19-and-flu-infections-feared-1.5094378>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publications/healthy-living/2018-2019-influenza-flu-vaccine-coverage-survey-results.html>
<https://muskoka411.com/start/nearly-half-of-canadians-dont-think-it-is-safe-to-take-the-covid-19-vaccine-but-most-will-take-it-anyway-finds-a-new-survey-from-kpmg/>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공부문 재택근무 확대 시행

인도 델리 NCT¹⁾ / 사회·복지

인도 델리 NCT 정부는 코로나19 관리 일선에 있지 않은 공공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1일부터 이들 직원의 최소 50%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한 방역지침 시행. 또한 민간 부문 대상으로는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권고

배경 및 목적

- 인도는 2020년 12월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천만 명을 넘어섬
 -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많은 국가
- 델리 NCT 정부는 델리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지침을 내리고, 민간부문에도 재택근무 시행을 권고
 -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인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무실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직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필수 직원이 아닌 경우 2020년 12월 1일부터 이들 직원의 최소 50%가 재택근무를 하도록 함
 - 대상 기관 및 직원은 델리 NCT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코로나19 관련 비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임
 - 우선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50%의 직원만 출근하도록 함. 12월 31일 이후에는 각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 이는 성공적인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새 방역지침에 따른 조치임
- 코로나19 관련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근무하도록 함
 - 의료기관, 경찰서, 교도소, 소방 및 응급 서비스, 전기, 수도 및 위생, 재난관리 분야 등 공공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하는 부문에 종사하는 직원은 근무하도록 함
 - 정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고위 간부 및 임원도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市가 인도의 수도

- 민간회사 대상으로는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권고

기타 방역지침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
 - 사무실이나 공공장소, 운전 중에는 마스크 착용 필수
 -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 또한 공공장소에서는 개인 간 최소 6피트(1.8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함

http://ddma.delhigovt.nic.in/wps/wcm/connect/DOIT_DM/dm/home/covid-19/orders+of+ddma+on+covid+19/order+2079

<https://www.google.com/search?q=covid+19+delhi&oq=COVID&aqs=chrome.1.69i57j0i67l4j69i60l3.7443j0j4&sourceid=chrome&ie=UTF-8>

<https://www.outlookindia.com/newsscroll/delhi-govt-issues-workfromhome-orders-for-50-pc-of-its-nonsential-services-employees/1984178>

<https://www.hindustantimes.com/delhi-news/for-delhi-govt-staff-work-from-home-is-easier-said-than-one/story-55hqa9hpGTJu5ygeyi9rl.html>

<https://www.livemint.com/news/india/with-26-624-new-covid-19-cases-india-s-tally-now-1-00-31-223-11608435774816.html>

세계도시동향 제495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1년 1월 18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